

양극화에 관한 오해와 시사점 : 기업의 투자, 인력, 수익성을 중심으로

조윤주*

1. 서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어나 우리나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이라고 함) 혹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주도, 해외시장개척,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 및 발전에 있어 대기업 위주의 압축 성장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가히 몰아주기식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기업 혹은 선도산업이 후발부문에까지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한 측면이 기인한 것이라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연관효과가 큰 대기업이나 선도산업을 키울 경우 성장효과가 중소기업이나 다른 영세산업으로 파급되어 가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둔화와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과거와 같은 수출-내수,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룹 혹은 집단 사이에서 후발부문에 대한 효과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우려와 같은 목소리에 MB정부는 출범이후 소득세, 법인세 인하 감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반을 두고 감세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 보여진다.¹⁾ 그러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최근 그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관련 있는 그룹 혹은 집단 사이에서 후발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가 적거나 미진할 경우 두 그룹 혹은 집단사이의 양극화 현상 심화로 인한 마태효과(Matthew-effect)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구조의 이원화 심화, 임금격차 심화, 소득분배구조 악화, 수출과 내수시장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의 양극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에 있어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미치는 영향과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해 양극화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은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의 내재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게 전개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²⁾ 하지만 양극화 우려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양극화에 대한 오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

* 조윤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02-589-3328, calicho@kistep.re.kr

1) 2008년 9월 한나라당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으나 2011년 6월 한나라당의 원충회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1.6.17., A3면 참조

2) 한국경제연구원(2011) 참조

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근원인 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가 경제전체의 중요한 순환 고리를 단절 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극화와 관련한 기존문헌을 살펴보고, 양극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양극화의 잘못된 인식을 재정립하고 상대적 불평등도와 절대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양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를 소개함으로써 불평등도와 양극화의 개념의 혼동으로 오는 오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대-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 중 투자, 고용, 수익성 양극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황분석은 전(全)산업을 분석하기에는 산업간의 측정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II. 본문

1. 이론적 고찰

1) 시장메커니즘 측면

양극화 발생에 관한 기존 선행문헌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 및 낮은 정책실효성, 대기업 투자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같은 기업경영상의 변화, 사회현상 및 구조의 변화, 거시경제의 충격 및 세계경제의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김자영(2007)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연구들³⁾을 중심으로 한 결과 국가별, 시기별,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며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이 무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과 수탁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위치(위상)상의 문제점을 인식한 Poter(1979)는 경쟁세력모형을 통해 양극화문제의 실태를 설명하였다. 한 기업의 경쟁세력은 동종업계의 기업들, 잠재적 신규 진입자, 대체재 등과 함께 구매자 및 공급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사이에서 소수의 구매자인 대기업이 다수의 공급자인 중소기업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구매자 교섭력(bargaining power of buyer)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박찬웅 외(2001)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하청업체들의 공급형태를 설명한 바 있다.

하준경(2006)은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경제환경 변화(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성 차이에 기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를 일으킨 근본적인 충격으로 기술진보, 세계화,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 등을 꼽았다.

Jenjejohn(2008)는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생산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 간의 수직적 통합형식인 전통적 기업조직이나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계약과는 구별되는 'outsourcing' 또는 '수직적 계열분리(deverticalization)'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계약구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3) 김자영(2007)은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비, 자금조달의 용이성, 기술혁신, 수익성의 차이를 다루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배구조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의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발 초기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특정기업들에 의해 공급자들(하청기업 또는 관련부품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요구, 기술탈취와 같은 부당한 대우(처우)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대기업)는 새로운 공급자를 모색하여 새로운 구매-공급자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자연스럽게 상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특정 기업이 산업전체에 미치는 과급효과 및 영향력이 높은 경우 독점기업으로써 공급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을 높이게 될 것이다.

2) 정부개입 측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개선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개입측면의 연구들 중 황선자(2010)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富)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수직적·종속적 하도급구조와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대기업의 자율과 시혜적인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과 같은 제도적 개선,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외되었음을 비판하였다.⁴⁾

이기동(2002)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하도급거래관계에서의 위험분담(risk-sharing)의 관계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모기업의 수요독점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하도급기업을 저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하도급에게 전가(risk-shift system)하는 현상을 파악하였다.⁵⁾

이장우(2011)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납품단가 인하압력, 구두발주, 기술탈취,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투 등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임혜란(2010)은 설문조사 실시결과 수급기업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을 강조했다.

김상조(2007,2011)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격차로 인한 대기업의 시혜적 지원이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장 친화적’ 수단만으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교섭력 확보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와 OECD는 소유-지배 괴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며 사전적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으므로 사후적으로 남용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2007년에 발표한 바 있다.⁶⁾

하준경(2006)은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시대에는 정부-(금융)-재벌 유착 메커니즘이 위험분산·통합 등 조정 역할을 했으나 경제발전이 따라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투자의 수익률도 낮아지면서 이 유착 메커니즘은 효율성을 잃게 되어 양극화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Lindert(2004)은 역사적으로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순비용은 사실상 제로이며 사회적 지출은 다분히 성장촉진적이었다고 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연구하였다.

4)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및 직원에 의해 1,869건의 하도급법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조사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하도급 상 전속 고발권 독점으로 인한 한계 등을 지적함

5) 하도급기업의 규모의 영세성 및 특정 완성업체별로 형성된 조립-부품간 배타적 거래관계를 지적함

6) “Report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European Union”, Sherman & Sterling LLP, ISS, ecgi, 2007. “Lack of Proportionality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Overview and Issues for Discussion”, Issued by the OECD 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December 2007.

3) 기업경영 활동 측면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 현상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의 성장, 경영활동 등 기업측면에서 설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Galbraith(1982)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이미 1890년대 ‘말과 참새이론’이란 이름으로 그 개념화가 시도되었으며, 만약 말에게 충분한 귀리를 공급한다면 그 중 일부는 길에 뿌려져 참새의 먹이가 된다고 하였다. Whnarczyk and Watson(2005)은 1993~1999년 기간 중 211개의 영국 하도급업체의 표본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에 있어서 다른 공급체인업체와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ichter and Goldemark(2009)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수요에 의한 기업의 매출과 관련하여 Barkcham, Gudgin, Hart and Hanvey(1996)은 수요의 제약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큰 제약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Harabi(2002)는 당해 기업에 대한 높은 제품수요(strong demand for the firms products)는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기업성장과 기업 재무구조 간의 관계를 분석한 Heshmati(2001)는 스웨덴의 미시 중소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비율이 매출액 증가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Becchetti and Trowato(2002)는 이탈리아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설립연도(나이)와 이외의 외부자금조달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등 재무구조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 분석에서 Chow and Fung(2000)은 1989~1992년 사이 중국의 제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결정 요인을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투자결정요인으로 매출액가속도 투자모형을 추정하여 당기의 매출액 증가율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2002)는 투자함수를 이용하여 1990~1997년 기간 중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와 민감도가 재무적 제약 외에 경영의 보수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과 2005년에는 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가 미래 투자기회와 미래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황선웅외(2012)은 1990~2009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산업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현상을 재무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총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산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며, 총자산 대비 세금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냈다.

박영석·신현한(1998)과 Shin and Park(1999)은 재벌기업 내 타 기업의 현금흐름의 크기가 당해 기업의 투자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 투자함수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재벌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기업과 계열사 간의 투자가 현금흐름 등 재무적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박승록·최두열(2011)은 1995~2009년 비금융 상장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집단 내 계열 주력기업의 투자는 계열기업인 해당 기업집단 내 계열대기업과 계열중소기업의 당기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 전체의 투자율 증가는 계열 내 대기업 또는 계열 내 중소기업의 당기 투자를 증가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열기업 내에서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적하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이병기(2012)는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매출 증가에 양의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성장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1차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기업의 부품 및 소재의 수요증가를

가져오게 되면서 협력기업의 매출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자동차 산업은 물론 조선산업의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양극화 개념 및 현황분석

1) 양극화 개념정립⁷⁾

경제성장과 경제발전과정 이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양극화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다. 소득의 양극화, 임금의 양극화, 투자의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등 사회 각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발생이라는 우려와 달리 양극화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양극화의 심화와 불평등도의 확대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은 양극화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분포가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양극단으로 집락화(clustering)(clustering)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양극화는 소득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양극단으로 집락화(clustering)되어 이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예는 소득 5분위 배율⁸⁾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소득의 편차를 중심으로 소득불평등도만을 강조하는 지니계수와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양극화를 포함하여 극화(polarization)⁹⁾라는 현상은 특정 분포에 있어 이질적 집단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존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가 이질적 집단의 출현 또는 중산층의 몰락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소득양극화이며, 현재 소득양극화는 절대적,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확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오용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오용으로 인해 양극화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격차 확대에도 양극화라는 개념이 오용되고 있으며, 양극화 개념의 확대 해석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도 확대 간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¹⁰⁾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분포가 확대되는 것¹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이러한 현상마저도 양극화로 해석할 경우 정책목표로서의 경제성장은 불공한 것이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다양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양극화로 해석할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유인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목표로서의 격차축소 및 양극화 해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인용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양극화를 나타내는 양극화지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¹²⁾인데도 불구하고 오용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불평등도는 “평균의 차이”만을 강조한 반면, 두 극화인 양극화는 “평균이 두 개”, 다극화인 경우 “두 개 이상”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분포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차이점

7) 한국경제연구원(2012)을 활용함

8) 소득수준을 20%씩 5개의 계층(5분위)로 나누어 상위 20%(5분위)계층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9) 극화는 이질적 집단의 출현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10) 양극화 개념을 확대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까지도 불공정의 산물로 오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임

11) 모든 경제주체의 소득이 동일한 성장률로 증가하더라도 소득분포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절대적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상

12) 한국경제연구원(2011) 참조

이 있다.

2) 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 지수¹³⁾

(1) 상대적 및 절대적 지니계수

불평등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분포의 형태를 측정한다. 지니계수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평균격차(mean difference)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균격차(d)는 확률분포로부터 나온 확률변수의 두 독립된 값에 대한 차이 값을 절대치에 대한 평균으로 정의된다. 또한 평균격차는 소위 지니평균격차(Gini mean difference) 혹은 절대평균격차(absolute mean difference)라고 불리며, 절대적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절대적 지니계수의 2배 값을 가진다.¹⁴⁾ 절대적 불평등도는 중심으로부터의 절대적 거리를 기준으로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절대지니¹⁵⁾ 및 표준편차가 대표적이다. 상대적 불평등도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분포의 형태를 측정한 것으로 지니계수¹⁶⁾가 대표적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상대적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로서 절대적 지니계수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으로 사용한다. 또한 평균격차를 그 집단의 평균값(μ)으로 나누어준 수치를 상대적 평균격차(relative mean difference)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지니계수의 2배의 값을 가진다.

상대지수와 절대지수를 살펴보면 절대지니는 상대지니에 평균을 곱한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소득평균을 성장의 정도로 사용할 경우 성장이 발생하면 절대지니는 대부분 증가하게 된다.

(2) 양극화지수

양극화지수는 두 개의 소득분포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전통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중산층으로 쇠퇴현상을 반영하는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11).

[그림 1]의 a, c, d, f의 이양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소득수준을 가정할 때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그림(2)의 그림과 같이 a, c 사이에 b의 소득수준으로 d, f 사이에 e의 소득수준으로 바뀌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림 1]에 비해 소득의 불평등도는 감소하였지만 소득 재분배 이후 소득 분포의 형태는 두 개의 극점을 나타내는 집락화(clustering)(clustering)된 양극화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양극화는 다수의 국지적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평등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정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Estenban and Ray(1994)이 제시한 ER지수에 의하면 극화의 개념은 다른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사이의 소위 유효반감(effective antagonism)의 합으로 정의되며, 양극화지수의 보편적인 다극화는 이질성(alienation)과 동질성(identification)으로 구성되어진다.¹⁷⁾ 집단간의 동질성은 모집단의

13) 극화(polarization)의 개념을 두 개의 중심으로 집락화되는 양극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지수에 대한 설명은 Araar and Duclos(2009)와 유경준(2007), 한국경제연구원(2011)에서 이용하여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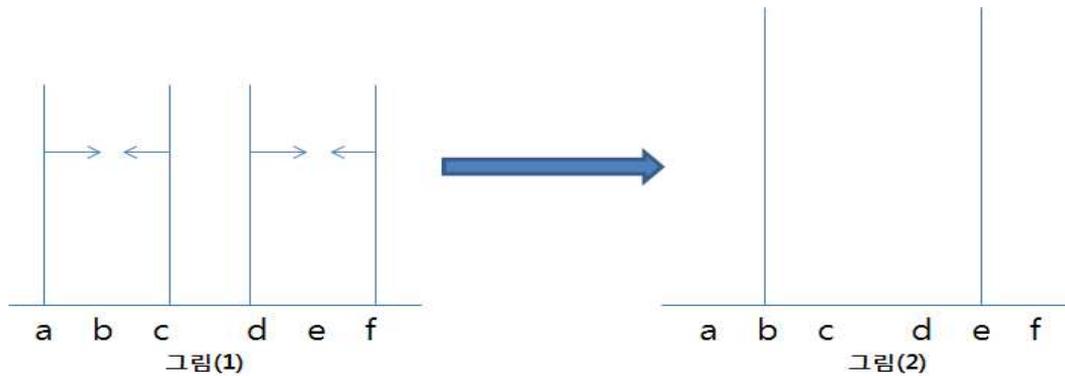
14) 평균격차($d = \sum_{i=1}^n \sum_{j=1}^n |y_i - y_j|$)로 정의됨

15) n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y_i 가 개인 i 의 소득을 나타낼 경우 절대지니는 $\frac{1}{2n^2} \sum_{i=1}^n \sum_{j=1}^n |y_i - y_j|$ 임

16) 상대지니는 절대지니를 평균값(μ)으로 정규화한 수치로 $\frac{1}{2n^2 \mu} \sum_{i=1}^n \sum_{j=1}^n |y_i - y_j|$ 로 정의됨

집중도가 커질수록 소득이 더 커지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두 집단 사이의 소득 부조화가 커져 이질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두 집단의 동질성이 커지고 평균소득에서 멀어진다면 격차(gap)를 느끼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평등도와는 다르게 다극화지수¹⁸⁾는 유효반감(effective antagonism)이라는 이질성과 동질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부분 민감도(local sensitivity)에 의해 특성화된다.

양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 예로 Wolfson(1994)¹⁹⁾의 양극화지수와 Esteban and Ray(1994)의 ER지수²⁰⁾, ER지수를 계량화한 Esteban, Gardin and Ray(1999)의 EGR 지수²¹⁾, 그리고 ER지수를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의 확대 적용한 Duclos, Esteban and Ray(2004)의 DER지수²²⁾에 의해 양극화란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림 1)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예시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11), KERI Zoom-In 11-01

3) 대-중소기업 현황

(1) 연구인력

기업의 총 연구인력은 약 25만명(2011)으로 대기업이 13만명, 벤처와 중소기업을 합하면 12만명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2007-2011) 기업유형별 연구원 증가율은 중소기업 11.2%, 벤처기업

17) 양극화의 주요개념인 이질성(alienation)과 동질성(identification)으로 구성되며, 이 두 개념의 상호작용은 유효반감(effective antagonism)의 합으로 정의됨

18) 유정준(2007)은 다극화지수 값들을 비교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다극화지수는 다극화 공리(axioms) 혹은 바람직한 특성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자세히 기술하였음.

19) 중위소득 근처의 소득 분산이 커질수록 소득양극화가 커진다고 정의하는 Wolfson지수는 $W = 2(2(0.5 - L(0.5)) - G) \frac{u}{m}$ 으로 정의되며, L(0.5)는 하위 50% 소득계층이 전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G,u,m은 각각 상대지니, 평균 및 중위 값을 나타냄

20) $ER = \sum_{i=1}^n \sum_{j=1}^n p_i^{1+\alpha} p_j |y_i - y_j|$ 로 정의되며, p_i/y_i 는 그룹 i의 평균소득 및 모집단에서의 비중을 나타내며, 모수 $\alpha \in [0, 1]$ 은 사회 전체의 양극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냄

21) ER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단을 일정 개수의 그룹으로 나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각 그룹의 소득분산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정보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그룹의 소득분산을 감안하여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EGR지수를 제안함

22) $DER = \iint f(y_i)^{1+\alpha} f(y_j) |y_i - y_j| dy_i dy_j$ 로 정의됨

7.2%, 대기업 6.5% 순으로 중소기업의 기간평균 증가율이 전체 기간평균보다 3.4%p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인 대기업과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결과 2007~2011년 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원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중소기업의 연구원 비중이 전체 47.3%까지 증가하고 있다.²³⁾ 그러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 3.6%로 큰 폭으로 감소하나 대기업은 2009년까지는 2%대로 중소기업의 1/5수준이었으나, 2010년 10.9%로 전년대비 8.4%p나 증가하면서 서로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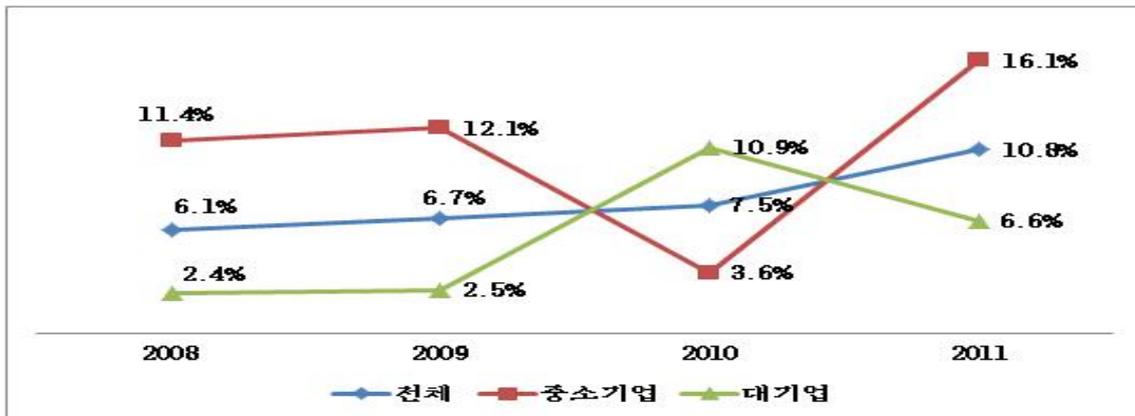
<표 2>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간평균
전체	185,633	197,023	210,303	226,168	250,626	7.8%
대기업	102,473	106,007	108,136	120,105	132,004	6.5%
벤처기업	41,594	43,111	46,988	46,725	54,999	7.2%
중소기업	41,566	47,905	55,179	59,338	63,623	11.2%

자료 : NTIS

(단위 : %)



(그림 2) 기업유형별 전년대비 연구원 증가율

주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 대기업은 300명 이상인 기업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인용

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NTIS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대기업의과 중소기업의 연구원 비중은 각각 52.7%와 47.3%임('05년 59.3%와 40.7%였음)

24) 기업유형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인력 증가율은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2008	2009	2010	2011
전체	6.1%	6.7%	7.5%	10.8%
대기업	3.4%	2.0%	11.1%	9.9%
벤처기업	3.6%	9.0%	-0.6%	17.7%
중소기업	15.3%	15.2%	7.5%	7.2%

연도별 기업 연구소 현황은 2007년 14,975개에서 2012년 25,860개로 약 58%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 관계회사제도²⁵⁾의 시행으로 일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편입되면서 대기업의 연구소가 측정범위 내 가장 높은 25.7%로 증가하게 되었다.

<표 3> 연도별 연구소 변화 추이

(단위 : 개소,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구소수	14,975	16,719	18,772	21,785	24,291	25,860
대기업	961 (3.8%)	1,023 (6.5%)	1,069 (4.5%)	1,126 (5.3%)	1,415 (25.7%)	1,617 (14.3%)
중소기업	14,014 (13.0%)	15,696 (12.0%)	17,703 (12.8%)	20,659 (16.7%)	22,876 (10.7%)	24,243 (6.0%)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2012년 현재 연구전담요원은 약 27만여 명으로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비중이 대기업보다 8.3%p 많으며 전체 연구원 중 58%의 연구인력이 학사학위 소지자였다. 하지만 석사이상의 고급인력의 경우 대기업이 20.6%, 중소기업이 11.6%로 대기업이 약 2배 수준의 연구인력을 보유하면서 고급인력 측면에서 양질의 우수인력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학위별 연구전담요원 현황(2012년 말기준)

(단위 : 명, %)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기타	총계
연구원수 (비중)	14,969 (5.5%)	71,932 (26.5%)	157,125 (58.0%)	24,847 (9.2%)	2,190 (0.8%)	271,063 (100.0%)
대기업 (비중)	10,736 (4.0%)	44,940 (16.6%)	68,385 (25.2%)	53 (-)	116 (-)	124,230 (45.8%)
중소기업 (비중)	4,233 (1.6%)	26,992 (10.0%)	88,740 (32.7%)	24,794 (9.1%)	2,074 (0.8%)	146,833 (54.2%)

주 : 1. 연구전담요원은 연구보조원과 관리직원은 제외함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2), 『기업연구소 현황분석』

(2) 연구개발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비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04~'07년 연평균 13.3%, '08~'12년 12.5%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증가 비중은 2004년 2.30%에서 2011년 2.56%로 0.26%p로 연구비 증가율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5년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 감소는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대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매출액경상이익률 감소(△0.8%p)와 매출액영업이익률

25)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한 회사를 일컬으며, 해당업체 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 등이 지분 소유비율에 합산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 보유율이 높은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됨

($\Delta 0.8\%p$) 등 수익성 관련 지표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기업의 성장성 매출액증가율($\Delta 9.0\%p$)이 2004년에 비해 하락하는 등 크게 둔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어진다.²⁶⁾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증가율 및 매출액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1년 3조 818억원 국가전체 R&D의 약 76%를 차지할 정도이며,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총 민간기업의 76%이상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약 3배에 이르는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대기업은 평균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2008년까지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은 200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기업 주체들은 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연구개발투자를 줄이면서 벤처기업의 경우 1% 미만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주체별 연구개발 증가율에서도 나타나듯이 2010년 이후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증가율은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반면, 대기업의 연구개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라기보다 관계회사제도의 시행으로 일부 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른 여파로 해석되어 진다.

<표 5> 주체별 전년대비 연구개발 증가율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민간	17.3%	9.1%	13.8%	13.0%	8.9%	8.3%	16.5%	16.4%
대기업	21.5%	8.8%	9.4%	9.3%	6.9%	6.7%	21.2%	17.1%
벤처기업	-8.8%	15.9%	34.8%	18.5%	12.3%	7.2%	0.8%	23.5%
중소기업	18.2%	5.3%	25.7%	30.7%	16.9%	17.3%	8.1%	7.6%

자료 : NTIS 재인용

26) 한국은행(2005)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경상이익률(7.0%→5.9%), 매출액영업이익률(6.8%→5.9%) 등 수익성 관련 지표가 모두 하락하였음

(단위 : 억원, %)



(그림 4) 대-중소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추이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3) 수익성

1인당 부가가치는 기업의 임금이나 이윤의 원천으로 기업규모별 임금, 노동분배 등 경영분석의 지표로서 중시되고 있다. 제조업의 대-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의 차이는 2006년 33.2에서 2010년 26.8까지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산성 능력이 향상되면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중소기업 간 역량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두 집단간의 차이는 규모라고 하는 절대적 차이를 수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절대적 차이가 아닌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표 6>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단위 : 천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112,418 (2.9)	120,535 (7.2)	137,649 (14.2)	140,321 (1.9)	153,203 (9.2)
중소기업	75,690 (2.6)	79,406 (4.9)	88,779 (11.8)	92,165 (3.8)	94,235 (2.2)
대 기업	227,811 (2.1)	257,180 (12.9)	295,396 (14.9)	300,170 (1.6)	351,984 (17.3)
격차 (대기업=100.0)	33.2	30.9	30.1	30.7	26.8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 대기업과의 격차는 대기업을 100.0으로 할 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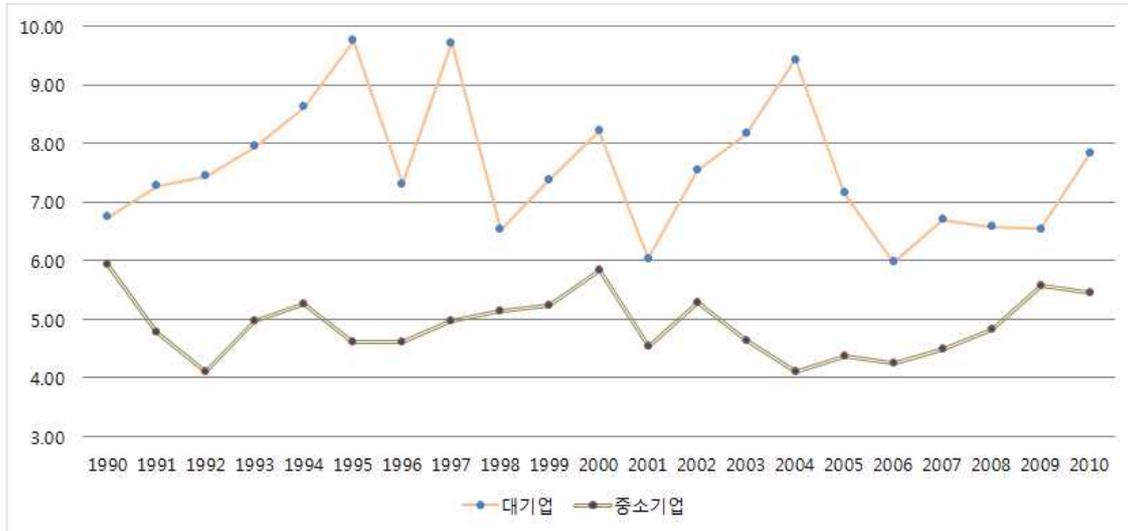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대-중소기업에 관한 많은 논의과정에서 특히 대-중소기업 간 성과격차가 대기업은 크게 개선된 반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감소했다는 지적이 대기업에 대한 비난 혹은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2010년 동안의 대-중소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참고)

기간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1991-1995년의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3.46%p이며, 1996-2000년은 2.67%p, 2001-2005년은 3.08%,로 2006-2010년은 1.81%p로 점차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단위 : %)



(그림 5) 대-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경제통계시스템(ECOS)

<표 7> 기간별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단위 : %)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대기업(A)	7.82	8.14	7.87	6.59
중소기업(B)	4.78	4.92	4.88	4.70
격차(A-B)	3.46	2.67	3.08	1.81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경제통계시스템(ECOS)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모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이익²⁸⁾은 기업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이자

27) 이병기(2012)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분석결과에서도 위탁 대기업의 이익률이 협력중소기업의 이윤율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 산업에서는 높은 상태로 자동차산업에서는 대기업의 성과 개선에 따라 협력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 연구결과가 나타남

28) 경상이익(Ordinary income)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경상이익은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의한 이익의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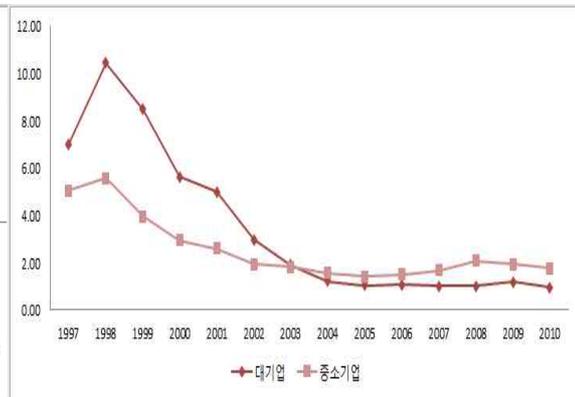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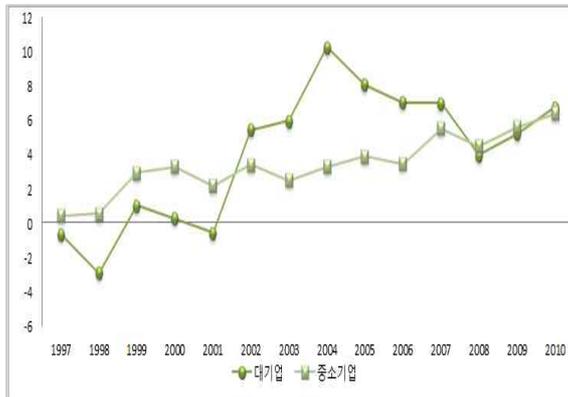
수익이나 비용 등과 같은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7]의 금융비용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과 채무구조 개선 등으로 인한 대-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2004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두 집단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기업은 몸집불리기식의 규모 확대에 주력하면서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차입경영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시장퇴출과 부도 및 파산으로 규모 확대보다는 채무구조 개선 및 안정에 주력하면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금융비용 비율을 점차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면서 대기업의 경우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총자산순손실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손실을 나타낸 반면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직전·후인 1997-1998년 2개년 동안만 마이너스(-) 손실을 냈을 뿐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기업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와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면서 총자산순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대기업은 2002년 큰 폭의 총자산순이익률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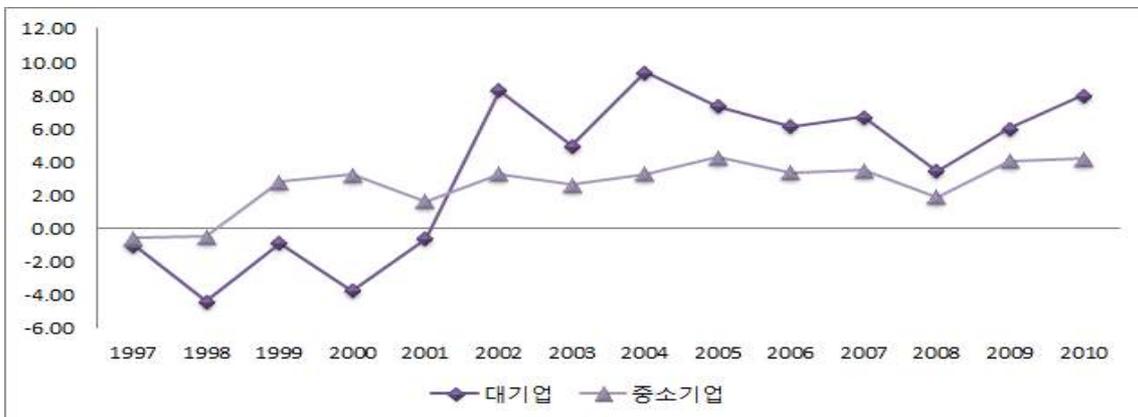
(단위 : %)



(그림 6) 대-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그림 7)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비율

(단위 : %)



(그림 8) 대-중소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경제통계시스템(ECOS)

I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켜왔다. 대기업의 견인차 역할이 미비, 낙수효과의 상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로 인한 소득, 소비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원인으로써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 2010년 이후 관계회사제도 시행과 함께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한데 반해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오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최근 5개년의 격차가 가장 낮은 1.81%p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분석 지표로서 증시되고 있는 1인당 부가가치 또한 현재까지 그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공정사회론을 내세우면서 대기업을 규제·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물론 기업의 연구인력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에 비해 양질의 우수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두 집단간의 규모에서 오는 절대적인 차이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양극화 심화 현상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를 광범위한 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양극화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격차 확대에도 양극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론의 소득양극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을 혼용하여 양극화가 개선 혹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최대 정책목표로 내거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 집단의 눈부신 성과는 중소기업과의 양극화와 동반성장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민주화와 경제력집중 심화 문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오남용으로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평등도지수인 지니계수를 양극화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인용되고 있음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불평등도는 평균의 차이만을 강조한 반면, 두 개의 양극단으로 집락화(clustering)되어 있는 양극화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개념적 차이의 인식부족이 사회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회갈등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여 언론의 개념적 혼용과 통계적 편의성 때문에 이론적 적합성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내재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현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김민구 (2008), 「경제상식사전」, 길벗, 2008, p.42-43
김자영 (2007), “한국의 기업 간 양극화에 대한 연구, 대·중소기업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승록외 (2011), “대기업 투자의 적하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2011,

pp.207-235

- 변양규외 (2012),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한국경제연구원」
- 신동균외 (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추이”, 「노동경제논집」 28(3), pp.77-109
- 산업연구원 (2006),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이장우 (2011), “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3, No.4., pp.77-93
- 이기동 (2002), “하도급 거래에서 위험부담 관계가 존재하는가?”, 「국제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2002.4, pp.111-149
- 이장우 (2011), 『패자없는 게임의 룰, 동반성장』, 미래인, 서울
- 임혜란 (2010), 「한국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정치경제」,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0, No.1
- 중소기업중앙회 (2013), 『2013년 중소기업 현황』,
- 최경수 (2008),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KDI정책포럼」 제191호, 2008
- 하준경 (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사회과학논총」, 제8집, 2006년 2월, p.483-50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각년도
- 한국경제연구원 (2011),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소득, 소비,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KERI」 Zoom-in 11-01
- 한국경제신문 (2011), “감세 통한 성장 MB노믹스 물거품 惡만 보고 경제 팽개친 與”, (2011.6.17.), A3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각년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기업연구소 현황분석』, 2012
- 한국은행 (2008), 『기업경영분석』, 2008
- 황선웅외 (2012), “우리나라 제조산업내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양극화 및 불균형에 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11권 2호, pp.119
- Duclos, J.Y., J. Esteban and D.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 pp.1737-1772
- Esteban, J. and 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 pp.819-851
- Esteban, J., Gardin, Carlos, and D. Ray (1999), “Extension of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Mimeo, Instituto de Analisis Economico, 1999*
- Galbraith, John Kenneth (1982), “Recession Economics”, *New York Review of Books* Vol.29, No.1, Feb.4, 1982
- Lindert, P. (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 Press*
- Matthew C. Jennehohn (2008), “Collaboration, Innovation, and contract Design”, 14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83, 2008
- OECD (2007), “Lack of Proportionality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Overview and Issues for Discussion”, *Issued by the OECD 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Dec., 2007
- Wolfson, M.C. (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4, pp.353-358